

법령 제·개정 동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9호, 2025. 12. 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는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의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 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 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 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p>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4호, 2025. 12. 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5.] [국토교통부령 제1542호, 2025. 12. 5.,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정하고,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관리·감독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안 제10조의4 신설)

항공교통관제시설을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인천·김포·제주 관제탑 등의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제주·김해 접근관제소 등의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대구·인천 지역관제소인 지역관제시설로 구분하여 명시함.

나.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안 제90조의2 신설)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기량의 유무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법정 필수 교육훈련 과정 이수 실적 등의 정기훈련 실적 및 180일 이내에 60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2) 기량 심사 중 정기 심사의 경우 그 실시 시기를 직전의 정기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으로 정하고, 수시 심사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한정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한 신청이 있는 등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안 별표 12)

- 1) 국제민간항공기준에 맞추어 전문항공교통관제사과정 지정기준을 초기 교육훈련 과정과 직무교육훈련 과정으로 구분하여 정함.
- 2) 초기 교육훈련 과정과 직무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과목·교육방법, 교관 확보기준, 시설·장비 확보기준, 평가방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교육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168호, 2025. 12. 2.,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
-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제19조 및 제29조).
-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제6조제2항제9호, 제10조제7호 및 제32조의2 신설).
-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2 신설).
- 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제34조제2항).
- 바.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사.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 미이행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6 신설).
- 아.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8조의2 신설).



국내외 ITS

월간토픽

2025년 12월 교통·모빌리티 분야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화와 제도·재정적 기반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기술 중심에서 실제 운영과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 국면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은 교통·모빌리티 혁신을 국가 성장과 민생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중장기 전략과 투자 확대에 나섰으며, 안전·효율·접근성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정리됐다. 산업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연결형 교통, 항공 모빌리티, 플랫폼·보안 기술 등 미래 교통 기술의 역할이 재정적되며, 신뢰성과 안전을 핵심 가치로 한 기술 경쟁이 부각됐다. 전반적으로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AI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국내 토픽

'26년 국토교통부 예산 역대 최대 62.8조원 확정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4조 6천억 원(8.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8천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다. 이번 예산은 건설 경기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SOC 분야에 전년보다 증액된 21조 1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공공주택 19.4만 호 공급과 K-패스 혜택 강화 등 주거·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공항·도로 등 안전 인프라 확충과 자율주행차 및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국토부는 새해 첫날부터 즉각적인 예산 집행에 착수해 민생 회복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12.3.)

광주형 자율주행 승부수는 '수요 맞춤형 차'와 '피지컬 AI'

광주시는 미래차 산업의 방향을 대량생산 중심에서 다품종 소량생산(HMLV) 기반 맞춤형 PBV와 피지컬 AI 결합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GGM을 중심으로 팹리스·모빌리티 파운드리 제조 체계를 구성하고, AI 기반 스마트 제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을 추진한다. 또한 앵커기업-중소기업-연구기관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기술 로드맵과 가칭 국립 인공지능 모빌리티 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광주일보, 2025.12.4.)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자율주행 늦었다...안전에 포커스 둘 것"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 준비 상황에 대해 "늦은 면이 있다"고 평가하며, 격차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개발 기초를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모셔널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나 테슬라 대비 상용화 시점이 다소 늦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그룹은 로보택시 기술의 내재화와 고도화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기아 80주년 행사에서 기아의 역사와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기아는 사사와 전기 콘셉트카를 공개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블로터, 2025.12.5.)

자율주행 늘수록 카카오모빌리티·티맵 주목받는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본격 확산되면서 지하·실내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내비게이션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테슬라의 FSD와 GM의 슈퍼크루즈가 한국에 도입되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하 주차장 등 GPS 음영 구간이 많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공동주행을 중심으로 개발된 해외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하 공간에서도 정확한 위치 인식이 가능한 융합 실내 측위(FIN) 기술과 주차 정보 기반의 미세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했다. 티맵모빌리티 역시 전국 단위의 주차·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형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이 실제 생활 공간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끊임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 2025.12.8.)

전국 '태그리스' 교통결제 도입 추진...AI로 환승센터 혼잡 예측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연구개발 로드맵을 통해 교통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자동 결제가 가능한 '태그리스' 시스템의 전국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간 호환성을 확보하고, 출퇴근 시간 승·하차 혼잡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I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철도와 환승센터의 혼잡·재난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차량 센서를 통해 땅꺼짐 등 도로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철도 운행 장애 시 AI 기반 원격운전 복구 기술을 도입하고, 수소 트램 버스와 BRT 전용 차량 등 친환경·대용량 교통수단 개발도 병행한다. (YTN, 2025.12.10.)

“눈앞에 온 UAM 시대” 서울시, 한강에서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시범운항 준비

서울시는 정부의 K-UAM 상용화 시점 조정에 맞춰 도심항공교통(S-UAM) 상용화 준비를 본격화한다. 정부가 기체 인증 지연으로 상용화 목표를 2028년으로 순연한 가운데, 서울시는 기존 4단계 사업 전략을 ‘초기 상용화-성장-성숙’ 3단계로 재정립하고 실증 없이 곧바로 상용화로 연결하는 전략을 확정했다. 기체 인증이 완료되는 즉시 한강을 중심으로 시범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선과 운영체계 구체화 예정이며,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운영·비상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 및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UAM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30분 생활권 입체 교통망 구현을 통해 UAM 대중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헤럴드경제, 2025.12.20.)

기업지원 R&D, 한 곳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R&D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R&D사업 통합시행계획’을 공동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 생태계 강화, 틈스 R&D, 기술사업화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5% 증액한 2.2조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대와 AI·디지털 전환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첨단·주력산업 기술혁신과 산업 AI 확산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을 투자하며, 반도체·미래차·로봇·자율제조 AI 등 전략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양 부처는 통합 공고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R&D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5.12.22.)

서울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끼임사고 막는다...‘스마트 진입제한’ 시스템 운영

서울시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돼 온 차량 끼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AI 라이다와 레이저를 활용해 지하도로 진입 전 차량 높이를 이중으로 자동 측정하고, 제한 높이 초과 시 시각·청각 경고와 함께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차단 방식이다. 실증 결과 감지 정확도는 99% 이상으로 확인됐으며, 서부간선지하도로에도 내년 3월 도입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 분석과 홍보·표지 개선을 병행해 끼임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며, 향후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패턴 분석과 추가 안전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투데이, 2025.12.29.)

아우토크립트가 CES 2026에서 공개하는 AI 모빌리티 보안의 미래

아우토크립트는 CES 2026에서 로봇·자동차·드론 등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한 AI 모빌리티 보안 솔루션을 대거 공개하며 안전 분야의 기준을 제시한다. CES 2026이 로보틱스와 드론 등 하드웨어 결합 AI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아우토크립트는 차량 생애주기 전반의 디지털 키를 관리하는 통합 차량 키 관리 시스템을 선보인다. 또한 AI 기반 위험 분석·위험 평가 자동화 기술도 새롭게 공개한다. 아우토크립트는 보안을 사후 대응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한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피지컬 AI 시대 모빌리티 신뢰성과 안전 경쟁력을 강조했다. (대한경제, 2025.12.30.)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DRT를 체계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에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RT의 기본 개념과 제도적 근거, 도입·운영 단계별 절차와 주요 고려사항, 지방정부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DRT에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지침서다. 국토부는 인구감소·고령화 지역과 교통 인프라가 미비한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DRT 활용을 확대하고, 향후 자율주행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12.31.)

해외 토픽

인드라, 미국 V2X 고속도로 테스트 완료

스페인 인프라·모빌리티 기업 인드라(Indra)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I-485 익스프레스 차로에서 C-V2X 기반 도로 요금징수 시스템의 실증 시험을 완료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C-V2X 기술을 도로 측 요금징수 및 운영 시스템에 통합한 사례로, C-V2X 차량이 실시간 통행료 정보를 직접 수신할 수 있다. 시험에는 도로변 장비, 3D 라이더 기반 안전 분석, 백오피스 시스템 연계가 포함됐으며, 보행자 출현·역주행 차량 경고 등 안전 알림 기능도 구현됐다. 노스캐롤라이나 터파이크청은 I-485 전 구간으로 기술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드라는 옴니에어 컨소시엄과 5G 자동차협회(5GAA)에 참여해 C-V2X 기반 커넥티드 모빌리티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ITS International, 2025.12.4.)

캡슈, 태국 스마트시티 혁신 허브를 위한 C-ITS 구축

캡슈 트래픽컴(Kapsch TrafficCom)은 태국 라용주 왕찬밸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협력지능형교통체계(C-ITS)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왕찬밸리는 태국 정부의 ‘태국 4.0’ 전략 하에 동부경제회랑 혁신의 중심지로 조성되는 대규모 스마트시티·혁신 허브다. 이번 사업은 태국 및 동남아 지역 최초의 엔드투엔드 C-ITS 실증으로, 차량과 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을 통해 교통 안전성과 흐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캡슈는 노변장치(RSU), 차량 탑재장치(OBU), 운영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사고 경고, 기상 알림, 공사 구간 안내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단계적으로 시험하며, 실증 결과를 향후 태국 전역의 C-ITS 도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ITS International, 2025.12.26.)

중국, 2030년까지 지능형·통합형·입체적 교통망 고도화 추진

중국은 인공지능(AI)을 교통 분야 전반에 본격적으로 접목해 2030년까지 지능화·통합·입체화된 국가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기술 혁신과 시나리오 기반 적용 등을 포함한 4대 전략 분야, 16개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핵심 기술 자립과 교통 인프라의 세계 최고 수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 전용 대형 AI 모델을 개발해 ‘교통 두뇌’를 구축하고, 연구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은 향후 컴퓨팅 파워, 데이터, 통신망 등 차세대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해 AI와 교통의 심층 융합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GHANA NEWS 2025.12.22.)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5.12.29.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일반용역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고도화 용역	경기도	675,103,000	2026. 01. 12.
일반용역	2026년도 버스정보시스템(BIS), 카운팅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경상남도 밀양시	105,856,000	2026. 01. 12.
기술용역	2022년 황성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감리 용역	이모빌리티연구조합	90,000,000	2026. 01. 15.
일반용역	2025년 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확장 구축사업	경기도 광주시	722,134,000	2026. 01. 20.
일반용역	2025/26년 EIPP 에콰도르 과야킬시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00,000,000	2026. 01. 20.
일반용역	AI 기반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 구축 사업 감리용역	인천국제공항공사	197,572,100	2026. 01. 20.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용역	2026년도 C-ITS 센터 S/W 유지관리 용역	본사	324,009,400	2026. 01. 26.

2025년 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확장 구축사업

일반사항

- ◎ 사업명 : 2025년 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확장 구축사업
- ◎ 사업기간 : 계약 후 240일(8개월)
- ◎ 사업예산 : 722,134,000원 (부가세 포함)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 제한된 도로(길이·폭) 여건에서 늘어난 차량 통행을 수용하기 위한 교통 신호제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시간 신호 운영시스템 연구개발(R&D)을 2019년 완료한 바 있음
- ◎ 방사형 가로망의 구조상 도심 교통난이 초래되고 있으며, 생활권 간 연계체계의 미흡으로 교통난이 가중되어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소통정보 제공 및 우회 전략이 필요
- ◎ 또한, 현재 내외부 도심지에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교통패턴 변화를 보이고 있어 TOD운영 및 신호 연동화를 통한 해소에는 한계가 있으며, 혼잡구간의 집중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첨단 교통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

사업범위

- ◎ (공간적 범위) 시도 23호선 : 경충대로 광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입구 ~ 곤지암사거리(9.3km), 국도 43호선 : 회안대로 상번천리삼거리 ~ 송정교차로(2.1km)
- ◎ (내용적 범위) 국도 ITS 복합 장비 이관 2개소, 터널 관리시스템 영상정보 연계 7개소, CCTV 신규 설치 7개소, VMS 교체 1개소, 스마트교차로 현장시스템 14개소(AI 카메라, 제어함체 등), 센터 H/W 및 S/W 설치, 개인형이동장치 신고시스템 개발, 최적 TOD 적용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노후 제어함체 교체 9개소

문의처

- ◎ 경기도 광주시 교통시설과 (031-760-8410)

2022년 황성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감리 용역

일반사항

- ◎ 사업명 : 2022년 황성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감리 용역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 ◎ 사업예산 : 90,000,000원 (부가세 포함)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배경 및 목적

- ◎ 본 감리용역사업은 “황성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리법인을 활용한 감리 수행으로 사업 추진방향, 사업 수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
- ◎ 감리 전문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추진 및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진행유도를 통한 성과물의 품질향상 도모
- ◎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예방하는 데 목적

사업개요

- ◎ 워케이션 및 모빌리티 예약/결제, 워케이션 스팟 예약서비스 제공, 지역관광지 소개 및 프로그램 연계 등
- ◎ All-In-One 플랫폼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문객·주민 편의서비스 제공

문의처

- ◎ 이모빌리티연구조합 (070-8766-0929)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고도화 용역

일반사항

- ◎ 사업명 :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고도화 용역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사업예산 : 675,103,000원 (부가세 포함)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배경 및 목적

- ◎ 2006년 도입한 교통정보센터 상황판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장애 발생,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로 교체 필요
- ◎ 노후된 상황판을 교체하고, 스마트한 교통정보 상황관제 환경을 구축하여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제고

주요 사업내용

- ◎ LED 전광판 기반 고화질·고성능 상황판시스템 구축
- ◎ 표출대상 확대(2종 → 5종 이상), 상황별 맞춤 관제 기능 구현

추진 방향

- ◎ 상황실 운영 요구사항 분석, 타 기관 사례 분석 등을 통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상황 관제 환경 구축
- ◎ 교통정보센터 정보자원 이전,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에도 무중단 교통정보 상황실 운영을 위해 임시상황실 조성 운영
- ◎ 다. 공종별 분리 시행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황실 고도화 용역을 주축으로 하는 협업 체계 운영

문의처

- ◎ 경기도청 교통정보과 (031-8008-6822)

ITSK NEWS



ITSKorea, 개방형 표준화 체계 확산 민-관 협력 강화(12.16)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2025년 12월 15일(월) 서울 엘타워에서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과 지자체, 민간기업 등 ITS 관계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관 합동 ITS 표준화그룹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ITS 표준화그룹’은 ITS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로, 지능형교통 분야 표준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민간-공공 합동 전문가그룹이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개방형 표준화 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25년에는 다양한 표준화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체계를 ‘민-관 합동 ITS 표준화 세부그룹’으로 확대하고, 4개 그룹 활동을 추진했다.

협회는 올해 총 12회의 그룹별 실무회의를 통해 분야별 표준화 아이টে을 발굴했으며, 지자체와 민간 업계가 함께 참여해 기술기준 개정, 국제표준(안) 마련, ITS 표준품셈 개정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능형교통산업, 정확한 통계조사 기반을 위한 산업특수분류 제정 고시^(12.31)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2025년 12월 31일(수), 국가데이터처가 「지능형교통 체계(ITS) 산업 특수분류」 제정·고시함에 따라 ITS 산업이 독립된 산업 분류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업 특수분류는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를 보완하여, 정부 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융복합 산업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통계 분류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특수분류 제정은 지난 6월 산업 특수분류 개발 대상 산업으로 선정된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로, ITS 산업이 국가통계 체계에 정식으로 편입되어 객관적인 산업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특수분류 제정으로 ITS 산업은 ▲산업통계의 정확성 확보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수립 ▲R&D 및 해외진출 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